

## 대법원 1978.9.26.선고 78누77 판결

【사업소득중의료소득을결정처분취소】 , [집26(3)행,17;공1978.12.15.(598) 11123]

### 【판시사항】

한약제도매상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객을 진찰하고 처방을 판매한 경우 의료업으로서과대상인지 여부

### 【판결요지】

한약제도매상의 처방의 조제판매행위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찰비 내지 보수를 받음이 없이 순수한 한약재로서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의료업 내지 조제업으로서의 별도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업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.

### 【참조조문】

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,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,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

##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상고인】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

【피고, 상고인】 청량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조구희 외 5인

### 【대상판결】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78.2.21. 선고 76구882 판결

### 【주문】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 【이유】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원심판결은 원고는 (주소 1 생략) 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(주소 2 생략) 소재 ○○○ 한약방에서 첩약을 조제 판매 (그것이 의료업으로서 과세대상인 여부는 다음에서 본다)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,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.

2.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(주소 2 생략) 소재 한약제도매업소인 ○○○한약방에서 한약재의 판매촉진을 위하여...한의사인 소외인을 고용(월급 150,000원)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고객을 진찰하여 약재처방을 하게 한 다음 그 처방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여 진찰비 또는 처방료등 의료행위의 보수를 가산하지 않은 순수한 한약재의 판매가격대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 및 첩약으로 조제. 판매한 수입을 다른 약재판매수입에 포함시켜 판매대장에 일괄기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첩약조제 판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, 그 판문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판시취지는 첩약의 조제판매행위는 일반적으로 위 법조 소정의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사정 아래서는 본건 첩약의 조제·판매는 한약재로서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외에 첩약조제에 따른 별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업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풀이된다.

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하고 그 9호에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은 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하여 그 제2호 에 의료보건업을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은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업 중 의료업, 조제업과 기타 요술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하고 그 제1호 로서 의료업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를 행하는 업으로 한다. 제2호 , 조제업은 약사가 의사, 치과 의사,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으로 한다( 제3호 는 생략함)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한의사가 업으로 사람을 진찰하는 행위는 의료업에 또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업으로 첩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조제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런 업으로 생기는 소득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.

그렇다면 본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경영하는 ○○○ 한약방에서 한약재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한의사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고객을 진찰케하여 약재처방을 하게 하고 그 처방에 따라 첩약을 제조.판매 하면서 진찰처방이나 첩약제조에 대한 진찰비 내지 보수를 받음이 없이 순수한 한약재로서의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거기에는 의료업 내지는 조제업으로인한 소득이 있다할 수 없으니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료업 또는 조제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정태원(재판장)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